박빙의 당권경쟁 '호남의 선택'이 승부 가른다

김민석·정청래 대혼전…불과 0.99%p차
권리당원 많은 텃밭서 치열한 구애 경쟁
선호투표제 '송영길 표 2순위' 변수될듯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원대회 첫 순회경선을 치른 지난 주말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당권경쟁이 한층 달아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 전대는 권리당원 수가 30%가 넘는 호남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돼 각 후보들의 텃밭 구애 경쟁이 여느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2.8%p(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앞서 충청권에서 지난 1일 치른 첫 순회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0.44%p 차로 1위를 차지했다.

부울경 결과에 충청권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45.51%를 득표해 선두를 달렸고, 김 후보는 44.52%로 2위를 기록했으며, 송 후보는 9.97%였다.

1위와 2위 간 누적 득표수 격차가 고작 0.99%p(1211표)에 불과해 당권경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정 후보 측의 강한 조직세로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두 곳 대결을 비교적 적은 표차로 마무리한 점을 들어 향후 레이스도 초박빙 판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당선권인 5위 안에 드는 후보가 친명(친이재명)계가 3명(박선원·최미화·김용), 친청(친정청래)계가 2명(최민희·한민수)으로 갈려 팽팽한 세대결 양상을 드러냈다.

결국 이번 전대는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호남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 표심에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주역, 남부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당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메가 광주 집회'에서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뒷받침해 지방주도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4일 광주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고, 광주를 "제 영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이라고 말해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한다"며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달라. 부탁한다"고 적었다.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 측 구호인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건 데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의 구호를 대놓고 현수막으로 거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직적 오더 표는 먹히지 않는다",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으로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시를 돌며 '이순신의 길 사즉생의 길' 걷기 행사를 가진 뒤, 순천시의회에서 '순천 시민 공감 토크'를 열었다.

오후에는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로 자리를 옮겨 '여수 시민 공감 토크'와 '광양 시민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송 후보는 순천 시민 공감 토크에서 "선호투표제라 송영길을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충청 결과를 보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과반을 얻을 수 없게 돼 있다. 송영길이 10%만 나오더라도 (누구도) 과반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은 3명의 당대표 후보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1·2·3순위로 모두 적게 돼 있다.

만일 17일 전대에서 1순위 표와 여론조사 등을 합친 누적 합계가 어느 후보든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가지 않고 3위를 한 후보의 2순위 표로 승부를 가린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지역순회경선과 같이 정·김 두 후보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송 후보의 표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짓는 방식이다.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초박빙 대결을 펼치면서 두 후보 지지층 모두 결선을 의식해 송 후보에게 2위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송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권리당원이 2순위를 누구에게 내줬는지가 결선의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남광주, 농업인·기업 상생 그린바이오 키운다

천연소재 생산단지 조성…12월까지 5개년 육성계획 수립
기업 154곳 수요 반영 맞춤형 지원…연구개발·판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소재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을 강화해 미래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그린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신품종 종자, 바이오 신소재 등을 개발·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시는 식품소재(나주), 천연물(장흥), 미생물(순천·곡성) 등 지역별 특화 기반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154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 자금 지원, 시험분석, 장비 활용 등 다양한 지원 요구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가와 기업이 상생하는 생산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수면·진정 효과가 있는 '흑하랑 상추'와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이 알려진 '한삼덩굴' 등 지역 특화 소재의 계약재배를 확대해 그린바이오 천연소재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시는 기억력 개선 기능성 신소재 개발과 사료곤충 기반 자원순환 산업체계 구축 등 5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인프라 확충과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강화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협의회와 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해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농업인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3파전 '격돌'

권향엽·조계원·안도걸 확정
15일 정기당원대회서 선출

권향엽

조계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초대 위원장 선거가 권향엽·조계원·안도걸 국회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기호 2번 조계원 의원(여수을), 기호 3번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출마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오는 15일 오후 12시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정기당원대회'에서 선출된다.

투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소속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9시까지, 전국대의원 투표는 당원대회 당일인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된다.

투표 방식은 후보자가 3인 이상 등록함에 따라 선호투표제(순위선정 투표방식)가 적용된다.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1~3순위)를 선택해 투표하며,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2순위 표를 재배분해 최종 당선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당원대회에서는 후보3명의 정견 발표에 이어 오후 1시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한다.

이후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리며, 연설회가 끝나는 오후 2시 30분 이후 시당위원장 선거 결과 발표와 당선인 수락연설을 한다.

조현호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초대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만큼 공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광주의 통합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투표에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수요인권강좌 무안·동부청사로 확대

12일부터 총 8회…차별·평화·디지털 등 인권 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직자와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운영해 온 '수요인권강좌'를 무안청사와 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수요인권강좌'를 총 8차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청사에서 진행해 온 수요인권강좌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안청사와 동부청사에서도 시범 운영된다. 통합특별시는 전남권역 공직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성과와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강좌는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영화와 연극 등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인권 문제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주제도 최근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해 직장 내 차별과 다양성, 디지털 인권 침해, 재난 피해자의 권리 등 일상과 밀접한 내용으로 마련했다.

첫 강좌는 오는 12일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의 '여행,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도를 그리는 일'을 시작으로 △'연극 베니스의 상인으로 마주하는 인권교육'(8월 26일·김혜준 문화예술교육센터 센터장)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으로 들여다보는 직장 내 차별과 연대의 힘'(9월 2일·정현아 오늘교육원 대표) △'다름을 연결하는 사회'(9월 9일·인경 광주인권지기 활짝 활동가) △'디지털 인권침해 문제와 대책'(9월 23일·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등이 진행된다.

이어 △'나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10월 28일·박종평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소장) △'제주항공 참사로 본 재난피해자 권리'(12월 16일·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 등 총 8개 강좌가 이어진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신정훈, 국회 하반기 상임위 기노위로 변경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최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은 제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기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됐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에너지 기반과 산업인력 정책을 가장 밀접하게 다루는 상임위이다"고 적었다.

이어 "기노위는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 에너지와 물 관리의 핵심 기관을 담당하면서 영산강 유역을 담당하는 영산강환경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기반으로 에너지민간기업 유치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나주의 에너지산업을 연계해 '글로벌 에너지특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오 기자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전국 최다 선정

86곳 중 19곳…2차 공모에 169곳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올해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전국 86개 마을 중 가장 많은 19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300kW~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태양광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26년 7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3천 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마을에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0개 마을, 5년간 총 500개 마을 선정을 목표로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입지·계통·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마을별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설명회부터 사업성 검토, 협동조합 구성, 신청서 작성 등 공모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